

# 촛불정신과 문재인 정부 개혁과제 정책 심포지엄

2018.12.18(화) 14:00~17:30  
국회도서관 지하 대강당

주최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민주연구원  
The Institute for Democracy

후원 **한겨레신문사**



# 목 차

❖ 프로그램 .....	1
❖ 인 사 말 .....	3
❖ 축 사 .....	7

## ▣ 발제문

❖ 정 치   포용정치의 과제 .....	11
고한석 (민주연구원 부원장)	
❖ 경 제   촛불 정신과 문재인 정부 개혁과제 - 경제 부문 - .....	25
김용기 (아주대학교 교수)	
❖ 사 회   촛불정신과 문재인 정부의 사회정책 과제 .....	35
김경희 (중앙대학교 교수)	
❖ 평화번영   촛불혁명과 한반도 평화 .....	45
김성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프로그램

## 행사 개요

- ❖ 일 시: 2018년 12월 18일 (화), 14:00~17:30
- ❖ 장 소: 국회도서관 대강당
- ❖ 주최/후원: 정책기획위원회, 민주연구원 / 한겨레 신문사
- ❖ 주 제: 촛불정신과 문재인 정부 개혁과제

## 일 정 표

### ❖ 개회식 및 심포지엄

시 간	일 정	내 용
14:00~15:00	등 록	참가자 등록 및 다과
15:00~15:05	개 회 식	국민의례
15:05~15:12		개회사 - 정해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15:12~15:19		인사말 - 김민석 민주연구원장
15:19~15:24		축사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15:24~15:29		축사 - 이웅선 청와대 시민사회수석비서관
15:29~15:35		기념촬영
15:35~15:40		촛불혁명 2주년 기념사진전 영상 좌장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15:40~15:55	발 제	정 치 포용정치의 과제 고한석 (민주연구원 부원장)
15:55~16:10		경 제 촛불 정신과 문재인 정부 개혁과제-경제 부문- 김용기 (아주대학교 교수)
16:10~16:25		사 회 촛불정신과 문재인 정부의 사회정책 과제 김경희 (중앙대학교 교수)
16:25~16:40		평화번영 촛불혁명과 한반도 평화 김성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16:40~16:50	토 론	정 치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
16:50~17:00		경 제 최배근 (건국대학교 교수)
17:00~17:10		사 회 남찬섭 (동아대학교 교수)
17:10~17:20		평화번영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17:20~17:30	청중토론	질의응답

# 인사말



정해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정해구입니다.

어느새 2018년도 10여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018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바쁘신 시간들을 내셔서 심포지엄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님과 이용선 시민사회 수석님, 그리고 좌장을 맡아주신 박주민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진행되었던 촛불집회가 올해로 2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촛불로 표출된 나라다운 나라에 대한 국민들의 염원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어느새 3년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가을부터 2017년 봄까지 우리는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공정의 가치를 국민의 힘으로 되살리고 회복시키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총 23회에 걸쳐 약 1700만명의 국민들이 참여했던 촛불집회는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임을 다시 한번 절실히 일깨우고, 우리 사회를 한 단계 성숙시키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러한 국민의 희망을 안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지난 1년 6개월 동안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그리고 “국민 모두가 다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리고 2018년 12월 오늘,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촛불혁명으로 대변되는 국민들의 염원에 얼마나 부응하고 있는지 재점검하는 기회를 갖는 것은 물론, 국민들이 원하는 개혁의 과제들을 정부의 정책으로 녹이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특히, 지난 9월 포용국가전략회의에서 정책기획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포용국가의 국가비전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는 국가 주도의 성장전략과 신자유주의의 영향으로 발생한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성별·계층에 상관없이 국민 한사람도 차별받지 않고 국민 모두가 잘사는 국가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 모두가 잘사는 포용국가를 만드는 것이 정부만의 과제는 아닐 것입니다.

정부와 분야별 전문가, 시민단체, 언론, 국민들의 의견들을 모아 포용국가로 가기 위한 길을 가다듬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혁신적 포용국가와 평화번영의 한반도를 건설하기 위한 방안들을 공유하고 전략을 가다듬는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인사말



김민석 (민주연구원 원장)

## 촛불의 염원, 포용국가를 함께 만듭시다.

촛불혁명은 대화하고 타협하며, 결과를 존중하는 성숙한 대한민국을 향한 ‘온 국민혁명’입니다. 촛불은 적폐청산을 통해 대한민국을 나라다운 나라로 만들라는 소박하지만 담대한 요구입니다. 나라다운 나라는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입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누구보다 더 포용의 힘을 잘 알고 있습니다. 포용의 가치를 계승해온 민주당은 누구보다 더 촛불의 명령을 명심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민주당 정부의 개혁과제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곳이 포용국가입니다.

내년 2019년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입니다. 대한민국 100년은 모든 세대가 온갖 시련을 함께 극복한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일제에 맞서 광복을 쟁취했으며, 참혹한 전쟁에 맞서 호국으로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었습니다. 가난에 맞서 산업화를 추진했고, 독재에 맞서 민주화를 함께 이뤄냈습니다.

대한민국 100년이 건국과 호국으로 ‘함께 만든 나라’, 산업화와 민주화로 ‘함께 이뤄낸 나라’의 역사였다면, 광복 100주년, 진정한 광복의 꿈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뛰어넘어 포용을 지향하는 ‘함께 잘 사는 나라’입니다. 2045년 대한민국의 미래는 압축 발전을 넘어 혁신적 포용국가라는 시대적 과제에 담대하게 도전해 포용경제, 포용외교, 포용사회, 포용정치, 포용문화가 융합 발전하는 성숙한 대한민국입니다. 정부주도 발전국가를 넘어 정부·시민사회·시장이 협력하는 사람 중심의 포용국가입니다.

포용국가는 사람중심의 국정철학을 토대로 한 혁신적 포용국가입니다. 포용국가는 우리민족의 열정과 흥을 되살리고, 대한민국의 포용 정통성에 근거해 그 어떤 것보다 사람이 먼저이고, 무엇보다 사람에게 투자하고, 내 삶의 변화를 체감하는 사람중심의 나라입니다.

보수와 진보로 나눌 수도 없고 나누어지지도 않는 그 자체로 온전한 대한민국, 포용국가는 또한 민주당의 가치이기도 합니다.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포용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가치는 대한민국이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소원한 백범의 정신, 다 잘 살아가자는 신익희의 호소, 행동하는 양심이라는 김대중의 신념, 사람 사는 세상을 향한 노무현의 꿈이기도 합니다.

포용국가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뉴노멀이라는 진정한 광복의 기회를 살리는 함께 잘 사는 나라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지능정보화라는 진정한 광복의 토대 위에 실현되는 창의적 융합의 나라입니다. 국민주권 민주주의라는 진정한 광복의 동력으로 정착되는 원칙 있는 협력의 나라입니다.

민족사적 도약을 실현하는 한반도 대정치를 통해 촛불의 염원, 포용국가를 함께 만듭시다. 누구나 공감하고 누구나 동참할 수 있는 촛불에서 포용국가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포용국가는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촛불의 완성입니다.

촛불혁명을 기념하여 열린 이번 정책 심포지엄에서 문재인 정부의 개혁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 12. 18

민주연구원 원장 **김 민 석**

## 축 사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이해찬입니다. ‘촛불정신과 문재인 정부 개혁과제 정책 심포지엄’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정책기획위원회 정해구 위원장님과 김민석 민주연구원장님, 좌장을 맡아 주신 박주민 최고위원님과 발제 및 토론을 맡아 주신 전문가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2년 전, 1600만 촛불이 대한민국의 어둠을 밝혔습니다. 국정농단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동시에 타올랐던 133일 이었습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약속드린 민주당 정부가 그 촛불정신을 계승해 지난 2년여 우리 사회에 뿌리박힌 적폐를 청산하고, 전쟁 없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성과와 과제를 동시에 안고 올해로 세 번째 겨울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촛불혁명이 흔들림 없이 진행 중임을 성과와 변화로 보여드려야 합니다. 촛불개혁 과제를 일제 점검해 사회 대변혁을 강하게 추동해 나가야 합니다. 양극화와 여기서 파생되는 사회·경제 불평등을 해소하고, 대립과 갈등을 변화의 에너지로 전환해 내야 합니다.

다가올 己亥년 새해는 3.1운동 100주년과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의 100년을 준비해야 할 중차대한 시기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100년을 열어가는 첫 걸음으로 ‘혁신적 포용국가’ 건설을 천명하셨습니다. 촛불혁명의 완수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시작과 맞닿아 있습니다. 사회대변혁을 통한 사회체질 개선 노력이 삶의 질을 높여나가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 촛불정신과 문재인 정부 개혁과제 정책 심포지엄

오늘 심포지엄을 통해 적폐청산, 민생경제회복, 한반도 평화 등 촛불개혁 과제를 함께 살펴보고, 혁신적 포용국가의 비전을 보다 분명하게 제시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심포지엄 준비를 위해 노력하신 관계자 여러분들과 귀한 시간 내어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축 사



이용선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

여러분 반갑습니다. “촛불정신과 문재인 정부의 개혁과제”를 주제로 한 정책 심포지엄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정해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김민석 민주연구원 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해주신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내빈 여러분, 고맙습니다.

촛불혁명은 문재인 정부의 출발점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국민의 희망과 의지로 탄생하였습니다. 촛불이 담지한 더 나은 민주주의는 우리의 미래이고, 국민과 함께 이뤄야 할 대한민국의 새로운 방향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1년 반 동안 촛불정신에 따라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이루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통하여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이루기 위한 초석을 다져 나갔습니다. ‘진실과 정의’라는 원칙에 따라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구현하고, 공정하지 못한 정책과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는 적폐청산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 일자리 창출 등 사회 불평등 해소를 위한 노력도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성과를 체감하기에는 아직 부족합니다. 불안한 미·중 관계가 한반도 평화 및 번영의 위험요인으로 남아있습니다.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는 아직 개선되지 않았고, 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불평등한 사회·경제적 구조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에 따른 노동과 소득, 교육 및 주거환경에서의 불평등은 국민의 삶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와 저출산·고령화시대의 진입은 우리의 미래를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새로운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평화를 경제와 연결하고 경제와 사회를 통합하는 방향입니다.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평화’와 더불어 ‘함께 잘 사는 포용적 성장과 혁신적 포용국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심포지엄을 계기로 촛불정신의 참 뜻을 되새기고, “국민 모두가 다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구현하기 위한 지혜가 모아지길 기대합니다. 며칠 후면 2019년입니다. 2019년은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해입니다. 3.1운동과 임시정부를 기념하는 일은 우리 선조들이 염원했고 촛불혁명이 추구했던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다지고, 다가오는 100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100년을 준비한다는 자세로 ‘혁신적 포용국가’의 개혁과제가 논의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정책기획위원회와 민주연구원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고, 발제자와 토론자를 비롯한 참석자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 12. 18.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 **이 용 선**

[정치]

# 포용정치의 과제

고한석 (민주연구원 부원장)





# 포용정치의 과제

고한석(민주연구원 부원장)

## 1 왜 포용정치인가?

### 1) 촛불혁명 시대의 요구

#### ○ 이것이 나라냐

- 분단시대의 정치는 특권과 반칙 등 강력한 적폐 양산해 국가불신 초래
- 좌우, 여야의 이념대립은 사회 모든 영역과 일상에서 적대와 갈등을 심화시켜 갈등사회 야기
- 소수 엘리트 중심의 대의정치는 주권자 국민이 소외된 배제민주주의 양산
- 중앙집중적인 소용돌이체제는 중앙과 지방의 양극화를 심화시켜 지방소멸 위기 심화

- 2016년 한국의 청렴도 순위는 OECD 35개국 중 29위
- 특권추구지수는 OECD 35개국 중 30위
- 2014년 한국사회의 공적신뢰도는 OECD 32개국 중 31위(현대경제연구원)
- 국민 대통합을 위해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미래가치'를 '신뢰'라고 응답한 국민 수가 38.9%로 가장 높게 나타남(2014년 국가대통합위원회)

- 집단간 갈등이 가장 심각한 관계는 여당과 야당의 갈등(4.54; 5점기준)과 보수·진보 이념갈등(4.32), 노사갈등(4.12), 빈부갈등(4.08), 영호남갈등(3.80), 세대갈등(3.64)으로 나타남(2014년 국민대통합위원회 '사회갈등 해소와 통합을 위한 국민의식 조사')
- 사회적 갈등을 악화시키는 요인에 대한 조사에서 '여당과 야당의 정치갈등'이라고 답한 경우가 53.9%로 가장 높게 나타남(2014년 국민대통합위원회)
- 우리사회의 갈등지수는 OECD 29 개국 중 7위로 매우 높은 반면 사회갈등관리지수는 27위로 바닥수준
- 높은 갈등지수와 낮은 갈등관리지수 때문에 갈등비용이 연간 무려 82조~246조원에 이름(삼성경제연구소).

■ 정치적 반응성에 대한 평가 ■

주요선거	2007 대선	2008 총선	2010 지선	2012 총선	2012 대선	2016 총선	2017 탄핵
다수 국민과 상관없이 소수가 정부와 정치 좌우한다(%)	80.4	81.3	80.2	82.1	83.3	80	85.1

자료: 한국일보-한국리서치, 2016.12.22.

〈지방소멸 위기 현황과 전망〉

- 우리나라 전체의 지방소멸위험지수(20-39세 여성인구/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17.3월말 0.97로 기준치 1.0에 근접해 주의단계에 진입
- 총 228개의 시군구별로 위험단계(0.5미만) 지역을 보면, 2017.3월말 85개(37.3%)에서 2020년 94개로 증가했다가 2040년이 되면 217개(95.2%)로 빠르게 확대될 전망
- \* 2020년 94개 → 2025년 130개 → 2030년 185개 → 2035년 210개 → 2040년 217개(통계청)

○ 나라다운 나라 - 촛불혁명의 이정표

- 촛불혁명은 국민 스스로가 나라다운 나라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장대한 역사적 드라마이자 세계 민주주의사의 신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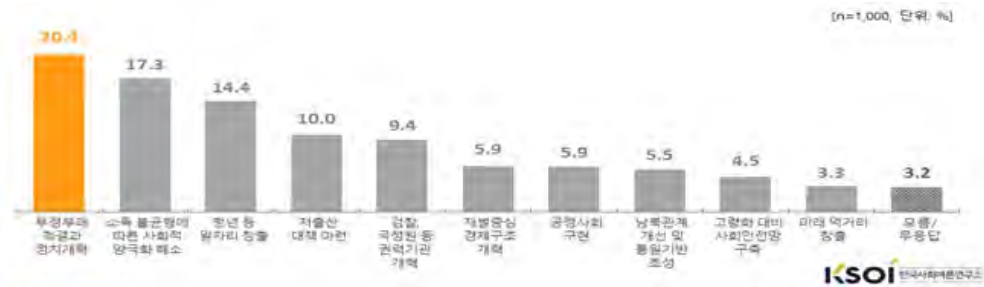
〈촛불혁명에 대한 외국언론의 평가〉

- “어떻게 하면 최고 권력의 부정과 무능을 평화적이고 규율을 지키면서 바로잡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귀중한 본보기가 되고 있다. (...) 멀지 않은 과거에 독재를 경험한 한국에서 수준 높은 시위와 민주주의를 보여줬다, 오히려 민주주의 역사가 긴 유럽과 미국이 배워야 하겠다”(Die Zeit, 2016. 12. 17)
- “시민들이 거리로 나섰을 때, 그들은 단지 임기가 1년 남은 대통령의 퇴진만을 요구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수십년 동안 한국을 지배해온 정치적 질서에 저항한 것”(뉴욕타임스, 2017.03.10)
- “한국인들이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저항한지 30년이 지난 후, 그들은 평화로운 방법으로 대통령을 파면하기 위해 저항했다”(워싱턴포스트, 2017.03.13)
- “민주적 참여권의 평화적 행사, 특히 평화적 집회의 자유는 민주주의가 생동하는 데 필수적인 구성요소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촛불집회는 이 중요한 사실을 전 세계 시민들에게 각인시켜 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독일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촛불시민 인권상 지정, 2017. 10.16)

① 비포용적 제도와 관행의 혁신

- 특권과 반칙, 배제와 차별 등 권력기관과 사회전반의 적폐를 청산해 기회와 경쟁이 보장되고 활력이 넘치는 공정한 나라

##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과제



자료: 한국사회여론연구소, 2017년 12월 8일 ~ 12월 9일, www.ksoi.org

## ② 대화와 타협, 협력의 제도와 문화 정착

- 분단과 대결, 이념갈등을 청산해 온 국민이 함께 하고 온 국민과 함께 하는 통합과 협력의 나라

## 〈협치는 일관된 민심〉

- 2010~2014년 세계가치조사에서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도가 조사국 평균치 57%보다 훨씬 높은 74%로 나타난 원인은 정부, 여당, 야당이 대화와 타협 없이 이념이나 미래권력을 두고 사생결단의 정치를 해 왔기 때문
- 20대 국회가 시작될 즈음 한국갤럽이 국민이 국회에 바라는 바를 조사한 결과 ‘서로 싸우지 말고 화합, 협치’를 당부한 국민이 15%로 가장 많았고 민생안정(9%), 서민정치(8%), 경제활성화(4%) 순으로 나타남(한국갤럽, 2016.05.26.)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기 국회동안 여야의 협치, 국회와 정부의 협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응답이 84.9%나 돼 압도적인 국민들이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협치에 낙제점을 줌(쿠키뉴스, 2017.09.26.)

## ③ 배제하지 않는 민주주의 강화

- 소수가 국민 위에 군림하고 배제하는 대의민주주의를 넘어 국민기본권 강화, 국민참여 확대해 국민주권민주주의 구현

## 〈촛불혁명은 대의민주제의 위기에서 파생〉

-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의 전모가 드러나고 있을 때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가장 눈에 띄는 현상은 정당 이탈, 대의민주제 불신이었음
- 국정농단의 책임을 져야 할 당시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가장 많이 이탈했지만, 야당 지지자들도 만만치 않은 수가 ‘지지정당 없음’으로 돌아섬. 전체적으로 60%에 육박하는 유권자가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응답함. 대의민주제 불신, 정당이탈이 광장에서의 촛불로 이어진 것임(경향신문, 2017, 11.20)

④ 지역분권, 지역포용, 지역혁신으로 동반성장

- 분권을 강화해 중앙과 지방이 함께 잘 사는 지방분권, 균형발전의 나라

〈문재인 대통령 발언〉

- “사회적 양극화와 함께 지역 간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국가균형발전의 엔진을 다시 힘차게 돌려야 합니다. (...) 우리 정부는 노무현 정부보다 더 발전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더 강력하게 추진할 것입니다. **분권과 포용, 혁신의 가치를 기반으로 지역이 주체가 돼 균형발전을** 이끌도록 할 것입니다. 중앙정부가 주도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자치단체가 정책과 사업을 기획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할 것입니다.”(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 2018.2.1.)

2) 한반도 뉴노멀 시대의 도래

○ 세계사와 한반도의 운명을 가를 대전환기

- 현재 한반도의 시간은 세계가 평화로 갈지, 냉전을 유지할지, 혹은 더 악화될지를 가르는 세계사적 변곡점
- 세계사의 변곡점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전반의 거대한 지각변동과 새로운 도약의 기회
- 일상화된 적대와 대립의 비정상상태를 일상적이고 항구적인 평화의 정상상태로 전환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

○ 민족사적 도약과 한반도 선사인 시대

- 일제강점, 전쟁, 민족분단으로 점철된 지난 100년, ‘수난의 약소반도국’, 세계의 평화위협국가에서
- 민족사적 도약과 번영은 물론 평화창조국가로서 인류공영에 크게 이바지하고자 했던 민족사적 여망을 실현할 ‘기회의 반도강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대전환기
- 세계와 한반도 대전환의 경로와 방향을 결정할 전철수(轉轍手)의 막중한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짐

## 2 포용정치는 무엇인가?

1) 의미

○ 포용정치

- 반대세력이나 소수정치세력을 배제 없이 존중하고
- 좌우이념간의 넓은 대립과



- 권력집중의 제로섬 게임을 벗어나
- 대화와 타협의 협력정치로
- 대한민국이 포용국가를 향해 뛰게 하는 심장의 역할

#### ○ 한반도 대정치 시대

- ‘한반도 대정치’는 포용정치의 한국형 모델
- 한반도 대정치는 특권, 이념, 적대, 전쟁위험으로 점철된 ‘분단의 정치’를 넘어
- 촛불정신 구현과 한반도 뉴노멀시대를 주도해
- 한반도 평화변영 실현으로 대한민국의 진정한 광복을 이끄는 신정치 패러다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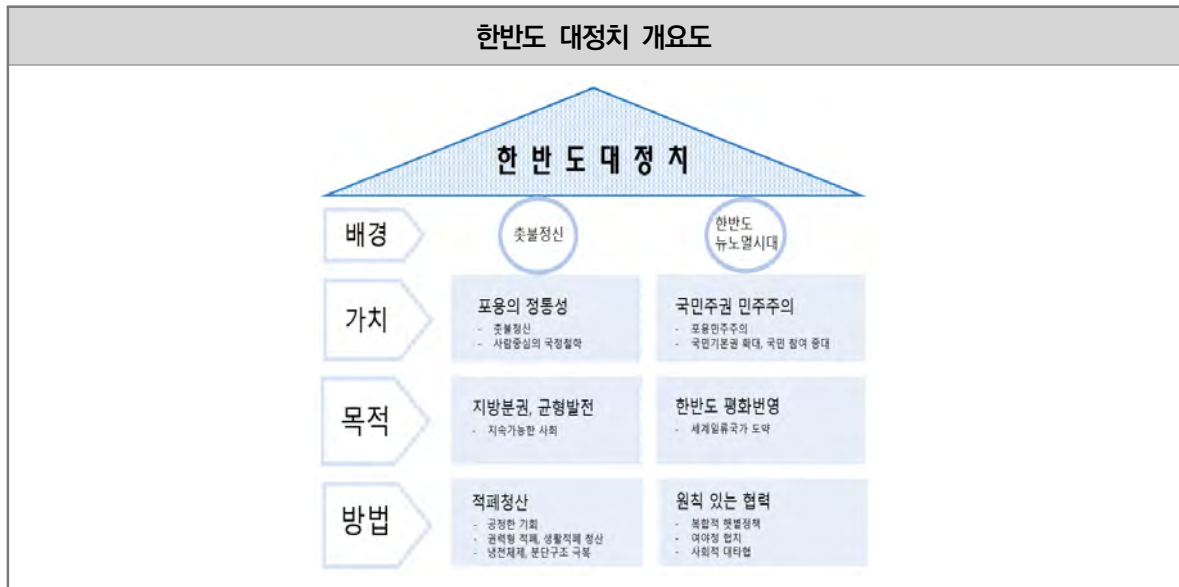
#### 〈문재인 대통령 연설〉

- “우리는 앞으로 **광복 100년으로 가는** 동안 한반도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를 완성해야 합니다. **분단이 더 이상 우리의 평화와 번영에 장애가 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국민들께 이 목표를 함께 이뤄갈 것을 제안합니다.”(제99주년 3·1절 기념사. 2018.03.01.)
- “우리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반드시 분단을 극복해야 합니다. 남북 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자유롭게 오가며 하나의 경제공동체를 이루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광복**입니다.”(제73주년 광복절 경축사, 2018. 08. 15.)

## 2) 한반도 대정치

#### ○ 한국형 **혁신적 포용정치** 모델

- 촛불정신을 실현하고 한반도 뉴노멀시대를 주도하기 위해
- 한반도 대정치는 2대 가치, 2대 목표, 2대 방법으로 구성
- 촛불정신으로 이어진 사람중심 포용정통성과
- 국민중심의 국민주권민주주의를 가치로 삼고
- 내적으로는 지방과 중앙이 함께 잘 사는 나라
- 외적으로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 적폐청산으로 분단시대의 특권과 반칙을 혁신하고
- 원칙 있는 협력으로 갈등과 대립을 넘어 포용하는
- 혁신적 포용정치



## ○ 2대 가치

### ① 대한민국 포용정통성

- 포용정통성은 우리의 역사 속에서 지속되어 온 사람중심, 국민중심의 국가운영원리로 포용국가의 역사적, 철학적 토대
- 포용정치는 남북, 여야, 좌우 구별 없이 새로운 한반도시대를 이끌 대한민국의 상식적인 공동체가치를 정립하는 것으로 시작
- 분단을 토대로 형성된 배제적·분단적 정통성, 국가중심·성장중심의 가치를 우리 역사 속에 면면히 흐르고 있는 포용정통성, 사람중심, 국민중심의 가치로 전환해 국민대통합의 전기 마련 대한민국 포용정통성

#### 〈포용정통성 관련 문재인 대통령 발언〉

- “지금부터 준비합니다. 그 과정에서 치유와 화해, 통합을 향해 지난 한 세기의 역사를 결산하는 일도 가능할 것입니다. 국민주권의 거대한 흐름 앞에서 보수, 진보의 구분이 무의미했듯이 우리 근현대사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세력으로 나누는 것도 이제 뛰어넘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역사의 유산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모든 역사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기 마련이며, 그 점에서 개인의 삶 속으로 들어온 시대를 산업화와 민주화로 나누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의미 없는 일입니다. 대한민국 19대 대통령 문재인 역시 김대중, 노무현만이 아니라 이승만, 박정희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모든 대통령의 역사 속에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의 치유와 화해, 통합을 바라는 마음으로 지난 현충일 추념사에서 애국의 가치를 말씀 드린 바 있습니다. 이제 지난 100년의 역사를 결산하고, 새로운 100년을 위해 공동체 가치를 다시 정립하는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2017.08.15.)

### ② 국민주권 민주주의

- 포용정통성의 역사적 가치를 현실에서 제도적으로 구현할 정치적 가치

- 사람중심의 포용정통성을 국민중심의 국민주권 민주주의로 실현
- 분단시대의 민주주의는 안보와 성장의 논리로 정당성 유지
- 한반도 대정치는 국민기본권 강화, 국민참여 확대, 국민의 감시와 견제, 대표성과 비례성의 강화 등 국민주권의 강화를 통해서만 정치적 정당성 확보
- 특히 소수자, 사회적 약자, 세대, 지역 등 어떤 차별과 배제도 없이 모두가 주권자로서의 권리를 누리는 포용적 민주주의
- 평화, 생태, 성평등, 민생문제 등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유능한 민주주의

## ○ 2대 목적

### ①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 한반도 대정치가 추구하는 내부적 목적
- 지역이 주민의 온전한 삶터, 쉼터, 일터가 되는 지속가능한 사회
- 지역마다 자신의 다양성과 자발성, 창의성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권한을 분산된 지역분권체제
- 지역 간 격차를 줄여 함께 잘 사는 사회통합국가
-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해 주민자치가 실현되는 주민주권민주주의

### ② 한반도 평화와 번영

- 한반도 대정치의 외부적 목적
- 남과 북이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며, 함께 잘 사는 한반도
- 분단 체제에 갇혀 우물 안 개구리 식 이념정치와 적대정치를 벗어나 남북, 아시아, 세계의 공동번영과 평화에 기여하는 세계일류국가를 향한 원대한 꿈
- 적대와 불신을 극복하고 대한반도시대의 정치적 상상력을 실현하기 위해 통 큰 화해와 협력의 포용적 노력 필요

## ○ 2대 방법

### ① 적폐청산

- 강자집단의 부정부패, 정경유착, 민생·경제적폐, 생활적폐 등 만연한 특권과 불공정 구조를 청산하고
- 국가권력의 정당성과 공공성을 높여야만
- 신뢰, 포용, 연대, 협력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회로 전환가능
- 제도적 개혁의 성과를 내야 국민들이 적폐청산의 성과 체감가능
- 실질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협치가 궁극적으로는 가장 효율적

- 구조적이고 제도적 차원에서 실질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협치가 가장 효율적

## ② 원칙 있는 협력

- 대내외적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대내적 협력정치와 그를 통한 국민통합이 필수
- 분단에 토대를 둔 대결의 정치를 대화와 타협을 통한 평화와 공존의 정치로 바꾸어야만 분단을 극복할 수 있는 국민적 에너지 형성 가능
- 이념적 접근이 불가하고 다양한 협력을 통해서만 해결 가능한 민생문제들 산적
- 국민의 삶과 무관한 자폐적 정치, 갈라치기 정치, 반대세력이나 소수 정치세력을 배제하는 주류정치, 양보와 배려 없는 승자정치를 청산하고
- 제도 개혁을 통해 다양한 영역에서 상호 타협과 양보, 협력이 가능한 국가 체제를 구축해야
- 국민의 이익 중심, 좌우극단세력 배제는 협력의 최소한의 원칙

협치의 영역	원칙	지향
대의기관과 국민 (시민, 사회, 시장)의 협력	- 대화와 타협과정 중시 - 동등한 권한과 책임 - 사회적 약자 존중	- 정치적 권위주의, 포퓰리즘 양 극단 극복 - 사회적 대타협
정부여당과 야당의 협력	- 국민이익 중심 - 과정의 투명성 - 좌우극단세력 배제	- 승자독식주의와 대결주의 극복 - 정치신뢰회복
정부여당 내 협력	- 다양성 존중 - 당의 화합	- 집권가능성 확대 - 안정적 협치의 토대
중앙과 지방의 협력	- 최대한의 분권 - 지방간의 균형발전	- 중앙집권주의 극복 - 중앙-지방 동반성장
남북의 협력	- 공동의 평화와 번영우선 - 상호존중 - 국제공조 - 국민의 공감대	- 완전한 비핵화 -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 3 무엇을 할 것인가?

### ① 적폐양산의 구조와 제도 혁신

- 적폐양산 구조를 바꿀 제도화에 주력
- 권력기관과 공직자의 부패를 감시하고 처벌할 수 있는 제도들의 도입
  - ※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 '국민권익위원회'의 반부패·청렴 업무 강화



- 범정부 차원의 반부패정책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국민들이 권력의 부패를 감시할 수 있는 제도들 강화
  - ※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국민소송제도 도입, 국민감사 청구 대상 확대, 시민공익위원회 설치 등 지속가능한 부패방지체계 확립
- 공직의 공공성을 높이고 국민에 대한 책임감을 높일 수 있는 생태계조성

## ② 국민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민생적폐청산

- 채용 비리, 학사비리, 입찰비리, 방산비리, 탈세 등 국민들이 일상에서 열패감을 느끼거나 국민안전과 관련된 분야의 부패행위 엄단
- 복지예산의 부정환 수급, 민관유착비리 등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분야에 대한 관리 강화
- 국민 삶을 제약하는 다양한 규제, 불합리한 제도, 공공성 결핍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적폐들을 정부가 선도적으로 혁신해 국민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형태로 개선

## ③ 여야정 협의체를 협치의 틀로 안정화

- 여야정 협의체를 국가적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생산적인 협치의 틀로 활용
- 협치가 제도화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자세와 태도가 중요
- 야당의 합리적 주장과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포용적 태도
- 승자독식의 제도와 질서를 대화와 타협의 정치문화가 작동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적 틀 마련
-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여 대의제의 민주성을 강화하고 협의의 정치문화를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선거제도 개혁
- 권력구조 개편 등을 포함해 중앙권력을 향한 사생결단식, 제로섬의 정치를 극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치제도 개혁

## ④ 한국형 사회적 대화기구 제도화

- 국가의 일방적 정책결정시스템을 넘어 사회의 다양한 이해집단이 서로 양보와 타협, 연대와 배려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 협치 필요
- 이해당사자들이 유기적으로 결합해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조정 노력 필요
- 절차적 정당성의 알리바이만을 제공하기 위한 과정이 되지 않도록 시간을 갖고 대화와 타협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대화기구 제도화
- 갈등이 첨예하고 불신이 높은 한국적 상황에 맞는 사회적 대화기구 모델 필요

⑤ 재정, 행정 등의 권한 이양으로 실질적 자치권보장

- 현재 8:2인 국세·지방세 비율을 7:3을 거쳐 6:4로 개편하여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지방 부담을 완화
- 저출생·고령화 등으로 인한 지방재정 악화 문제를 보완하고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고향사랑 기부제를 도입
- 지역상생발전기금을 확대·개편하여 지역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이 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균형장치를 마련
- 자치단체의 조직·인사·재정 등 자율성을 확대하는 한편, 방만한 운용 방지를 위해 조직·인사·재정 정보 공개를 확대

⑥ 주민자치 강화와 지역차원의 직접민주주의 확대

- 단순 자문기구의 역할을 수행해왔던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해 **실질적 역할과 권한 부여**
- 주민직접참여제도(주민발안, 주민소환, 주민투표, 주민참여예산제) 등의 제도를 개선해 실질적 주민참여 보장

〈주민직접참여제도 운영현황〉		
구 분	도입년도	제기건수('17년 기준 누계)
주민발안	'99	239건 (연평균 13건)
주민소환	'07	8건 (개표 6, 미개표 2)
주민감사	'99	연평균 18건 (서울시 제외시 8.9건)
주민투표	'04	8건 (개표 7, 미개표 1)

⑦ 공론조사, 시민배심원제 등 국민주권 민주주의 제도들 강화

- 국민들이 토론과 숙의의 과정에 참여해 공공의 문제들을 함께 결정할 수 있는 국가공론화위원회 등의 국민주권 민주주의의 제도화
- 국민들이 대의체계를 감시하고 견제해 정부와 의회의 부패와 무능을 감시할 수 있는 견제제도들의 확대
- 국민들이 정치적 문제 뿐만 아니라 일상의 문제들을 스스로 제기하고 해결에 참여해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국민발안제 등을 도입해 국민체감형 생활 민주주의 강화

#### 〈신고리원전 공론화 이후 숙의민주주의에 대한 반응〉

- 신고리원전문제를 공론화과정으로 결정한 후 여론조사결과를 보면 우리 국민은 정부의 일반적인 정책결정이 나 국회 표결 등 대의민주주의적 의사 결정을 넘어 국민 공론화를 통한 정책결정(숙의민주주의)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전체 응답자의 83.2%가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 결정과정에서 활용한 ‘공론조사 확대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고, 72.7%가 공론조사를 시행·관리하는 ‘기구 상설화’에 대해 찬성함(세계일보, 2017.10.30.)

#### ⑧ 민주시민교육의 확대강화로 민주주의 2.0 구현

- 절차적 제도적 민주주의 시대(민주주의 1.0)를 넘어
- 사람중심의 태도, 존중, 양보, 소통과 타협, 연대와 배려 등 포용적 민주주의를 익히고 실천하는 포용민주주의 역량 강화
- 가정, 직장, 학교 등에서 포용민주주의를 실천할 수 있는 능력 함양

#### 〈문재인 대통령 연설〉

- “민주주의는 제도이고, 실질적인 내용이며, 삶의 방식입니다. (...) 사람에서 사람으로 이어지는 민주주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정치와 일상이, 직장과 가정이 민주주의로 이어질 때 우리의 삶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역량이 더 성숙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갑시다. 관행과 제도와 문화를 바꾸나갈 일은 그것대로 정부가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일상화되어있는 비민주적인 요소들은 우리 모두 서로 도와가며 바꾸나갑시다. 개개인이 깨어있는 민주시민이 되기 위한 노력은 그것대로 같이 해나갑시다. 민주주의가 정치, 사회, 경제의 제도로서 정착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상에서 민주주의로 훈련될 때, 민주주의는 그 어떤 폭풍 앞에서도 꺾이지 않을 것입니다(6월민주항쟁 30주년 기념사, 2017.6.10.)

[경제]

# 촛불 정신과 문재인 정부 개혁과제 - 경제 부분 -

김용기 (아주대학교 교수)



# 촛불 정신과 문재인 정부 개혁과제 -경제 부문-

김용기 · 정책기획위 위원

아주대 교수

2018. 12. 18.

## 목 차

### I 장. 현황 진단

1. 준비가 미흡했던 최저임금 상승
2. 설명이 부족했던 고용과 소득상황
3. 파이팅이 아쉬웠던 부동산 대책

### II 장. 경제개혁 과제와 전략

1. 고용상황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비전 제시
2. 부동산 대책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대한 태도의 수정 필요
3. 복지, 재정(의 확장적 역할)에 이어 금융의 생산적 기능 강화
4. 포용국가 3개년 계획의 목표는 GDP 성장이 아닌 삶의 질 개선

## I 장. 현황 진단

### 1. 준비가 미흡했던 최저임금 상승

#### ● 부정적 효과

- ✓ 소상공인(특히,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165만 명)의 부담 증가: 임대료 및 카드수수료 경감 등 보완대책을 뒤늦게 마련
- ✓ 임금근로자 가구에 혜택이 한정: 4426만2천명의 15세 이상 인구 중 임금근로자는 2027만4천명(45.8%)

<그림 1> 15세 이상 인구와 취업자 수



<표 1> 취업자의 구성

① 임금근로자	2027만4천
상용근로자	1385만9천
임시근로자	490만6천
일용근로자	150만9천
② 자영업자 + 무급가족종사자	681만7천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165만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401만9천
무급가족종사자	114만8천
취업자 (① + ②)	2709만

3

#### ● 긍정적 효과

- ✓ 임금근로자 가구소득 크게 증가 (5년 만에 3분기 연속 경제성장률 상회)

<표 2> 근로자가구 소득증가율, 경제성장률 상회

분기	경제성장률	소득증가율	1분위 (하위 20%)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2018. 1	2.8%	6.33%	0.21%	0.64%	3.89%	6.93%	10.17%
2018. 2	2.8%	7.71%	5.96%	1.06%	3.52%	6.66%	13.40%
2018. 3	2.0%	7.52%	6.17%	3.87%	5.78%	8.41%	9.38%

자료: 통계청, 전년 동 분기 대비



4



## 2. 설명이 부족했던 고용 및 소득 상황

① (고용)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수 증가: 2017년 30만 명 대 증가에서 2018년 10만 명 대 이하 증가로

● GDP 2% 후반 성장 불구, 전년 대비 취업자 수 증가가 미미한 것은 한국경제가 '고용 없는 성장'을 하고 있다는 증거

● '고용 없는 성장'의 이유는?

- ✓ 제조업 고용 창출력의 추세적 약화. 특히 고용유발계수가 높은 조선 및 자동차 산업의 부진
- ✓ '골다공 수출' 심화: 수출의 부가가치 해외유출비중 세계 최고 수준
- ✓ 내수 비중의 약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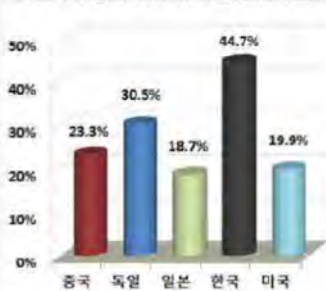
(이외에도)

- ✓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감소가 2017년부터 시작
- ✓ 1차 베이비부머세대(1955~63년생)의 1차 노동시장에서의 은퇴 → 자영업 경쟁격화 최고조
- ✓ 재정의 긴축적 운용 (& 말로만 일자리 중심 운용체계 구축)
- ✓ 금융의 적절한 역할(생산적 금융 기능)의 부재

5

<그림 3> 한국의 골다공 수출: 주요국 수출의 부가가치 해외유출비중과 비교

<주요국 수출의 부가가치 유출률(2011년)>



<주요국 수출의 부가가치 유출률 추이>



자료 : WIOD통계를 이용한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계산.

- 2011년 44.7%로 독일(30.5%), 중국(23.3%), 미국(19.9%), 일본(18.7%) 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
- 이유? 제조업의 해외생산기지 선호현상 + 국내 고용 및 부가가치를 유발할 수 있는 국내 부품 제조업 (중소기업, 뿌리산업) 육성의 실패

6

② (소득) 2017년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와 2018년 가계동향조사를 직접 비교한 데서 비롯된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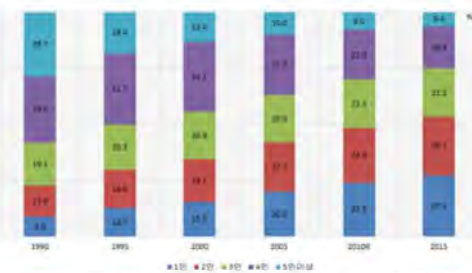
- 2017년 조사는 모집단이 2010년 인구센서스에서 확인된 한국의 가구이며 2018년 조사의 모집단은 2015년 인구센서스에서 확인된 한국의 가구
- 두 개의 모집단의 성격은 매우 다름: 2010년 이후 5년간 가구구성의 변화가 반영
- ✓ 2015년 한국 가구는 2010년 한국가구에 비해 1인 & 2인 가구; 노인 가구주 가구; 여성가구주 가구가 많음

<그림 4> 총 조사 가구 및 가구주 증가율(1990~2015)



2010~15년: 인구 4971만 → 5107만(2.7% 증가); 가구수 1796만 → 1956만(8.9%, 160만 가구 증가)

<그림 5> 전체 가구 중 가구원 수 별 비중(1990~2015)



2010~15년: 4인 이상가구는 30%(531만) → 25.2%(481만)으로 감소; 2인 가구는 24.6%(434만) → 26.1%(499만)로 증가

- 결국, 2017년 조사 대상 표본 가구와 2018년 조사 대상 표본 가구에 속한 전 가구원이 2017년과 2018년에 완전히 동일한 소득을 얻었다고 할지라도 2018년 조사 1분위 가구의 소득은 2017년 조사 1분위 가구 소득보다 낮게 나오게 되는 결과

<그림 6> 연도별 총 가구 중 여성가구주 가구 비율 (1990~2015)



자료: 통계청,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집계 결과

- 2010~15년 중 여성가구주 가구는 26.6%(469만 가구) → 29.6%(565만 가구)로 증가
- 그 외에도 70세 이상 가구주 가구는 10.3%(183만 가구) → 13.1%(250만 가구)로 67만 가구가 증가

### 3. 파이팅이 아쉬웠던 부동산 대책

- 부동산 대책의 대상은 한국사회의 가장 강력한 이익집단인 '부동산 불패신화 카르텔' (민간 금융사의 주담보 대출을 통한 사적 이익 극대화 + 재벌 건설사 + 다주택자의 투기와 재산증식 욕구)
- 상대가 강한 만큼 강력한 대책이 필요했음
- ✓ 9.13 대책 중 '다주택자의 투기지역 등에 대한 신규 주담대 금지'로 상승세는 꺾였지만... 너무 늦었음
- ✓ 임대주택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는 구멍(루프홀)도 존재. LTV 40%까지 가능. 기존 주담대 유지 가능



[ 9 ]

## 목 차

### I 장. 현황 진단

1. 준비가 미흡했던 최저임금 상승
2. 설명이 부족했던 고용과 소득상황
3. 파이팅이 아쉬웠던 부동산 대책

### II 장. 경제개혁 과제와 전략

1. 고용상황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비전 제시
2. 부동산 대책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대한 태도를 수정할 필요
3. 복지, 재정(의 확장적 역할)에 이어 금융의 생산적 기능 강화
4. 포용국가 3개년 계획의 목표는 GDP 성장이 아닌 삶의 질 개선

[ 10 ]



## II. 경제개혁 과제와 전략

### 1. 일자리 상황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비전 제시

- 지난 1년 6개월간 방향 대전환에 대한 국민적 공론화 실패
- ✓ '일자리는 민간(대)기업투자 확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기존의 인식에서 진전되지 못하는 상황
- 단기적으로 시급한 일자리 정책과 편더멘털 강화를 통한 일자리 기반 확충 전략을 구분하여 병행하는 전략이 필요
- ✓ 단기, 중기(2~3년) 일자리의 설계와 과감한 추진: 공공부문 특히, 사회서비스부문 일자리 정책의 드라이브가 필요. 치매국가완전책임제, 전국민아이돌봄국가완전책임제, 에너지전환정책 본격화, 지역 기반 커뮤니티형 일자리 등 추진
- ✓ 중장기적으로 민간 부문 중심 혁신성장형 일자리 확충 병행
- 공부와 일(직업훈련)을 병행하는 청년일자리의 대규모 조성
- ✓ 독일은 듀얼시스템을 통해 350개 산업영역에서 130만 명의 청년일자리를 (저수지와 같이) 지속적으로 조성



11

### 2. 부동산 대책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대한 태도를 수정할 필요

- 정부 정책 변화가 가져올 수 있는 신뢰 저하에도 불구하고, 잘못되었을 경우 1회에 한해 그것을 바로잡는 것은 옳바름
- ✓ 영국의 경우 대처의 민영화 정부 주요산업이 헐값 매각되어 국민들의 절도, 상하수도 등 요금부담이 가중 → 영국 노동당은 '국민의 예산(budget for people)'을 내걸고 1997년 집권 후 민영화된 사업에 대해 1회에 한해 '횡재세(windfall tax)'를 부과
- 다주택자가 보유주택을 내놓게 하는 강력한 방법이 필요
- 필요하면 '2018년 30% 상승분을 바로 잡겠다'는 의지 피력

Fiscal Studies (1997) vol. 18, no. 3, pp. 279-291

#### The Windfall Tax

LUCY CHENNELLS\*

#### Abstract

This paper analyses the windfall tax on the privatised utilities, introduced in the 1997 Budget. It discusses the main arguments put forward for the tax and sets out the details of its scope, scale and method of implementation. The tax is evaluated against the guidelines of economic efficiency, fairness and administrative feasibility. A one-off tax based on past profits should be efficient, provided that the statement that it is one-off is credible. However, as a tax levied on companies, it does not directly tax the windfall gains that were made in the past by shareholders in the companies concerned.

JEL classification: H25, L31, L96

#### INTRODUCTION

'Our reform of the welfare state — and the programme to move the unemployed from welfare to work — is funded by a new and one-off tax on the excess profits of the privatised utilities.'

Gordon Brown, Budget speech, 2 July 1997

The centrepiece of the Labour Party's first Budget in 18 years was the introduction of a welfare-to-work scheme, designed to help the young and long-term unemployed back into work. The programme, projected to cost about £1.5 billion, will be financed by a one-off tax on the privatised utilities. The Budget revealed that the tax would raise a total of £5.2 billion in two stages, from a group of over 50 privatised utility companies, and would be based on a measure of the increase in the value of the companies during their first four years in the private

12

### 3. 복지, 재정(의 확장적 역할)에 이어 금융의 생산적 기능 강화

- 금융의 적극적 역할 필요
- ✓ 은행에 위임된 '신용창출' 기능은 주권국가 고유의 '화폐발행' 능력과 동일
- ✓ 신용창출이란 공공적 기능이 민간은행의 사적 이익극대화와 부동산 투기에 활용되어 왔다는 점에서 근본적 문제
- ✓ 민간은행의 생산적 금융 강화와 지방도립은행의 신설 등을 통해 신용창출능력의 일부분이 공적 이익을 위해 활용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



[ 13 ]

### 4. 포용국가 3개년 계획의 목표는 GDP가 아닌 삶의 질 개선

- GDP 성장률 이외의 포용성, 지속가능성에 관한 지표의 설정과 개선을 국정목표로 삼아야
- ✓ 노동생산성, 고용률, 건강수명, 중위가계소득의 개선, 빈곤률, 소득 및 자산 지니계수의 개선 등이 국정의 구체적인 정책목표로 제시되어야



[ 14 ]

[사회]

# 촛불정신과 문재인 정부의 사회정책 과제

김경희 (중앙대학교 교수)





# 촛불정신과 문재인 정부의 사회정책 과제

김경희 (중앙대학교 교수)

## 1 서론

□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포용사회 부문의 국정목표는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이며, 국정전략으로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노동존중 및 성평등을 포함한 차별없는 공정사회, 자유와 창의를 넘치는 문화국가를 설정했음.

□ 포용국가 비전과 전략(2018. 9. 11)

- 지난 9월 발표한 포용국가론은 사회정책 3대 비전(9사회통합 강화, 사회적 지속가능성 확보, 혁신능력 배양 및 구현)과 9개의 전략을 제시(포용국가론의 상세한 내용은 생략)
- 기존의 최소주의적 사회정책의 한계를 탈피하여, 사회정책을 통한 사회의 포용성 향상과 혁신능력 배양을 사회발전의 핵심 전략으로 설정하고 있음.
- 개별적이고 부문별 정책을 통합하여 사회정책의 개념을 도입하였으며,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경제패러다임과 포용적 사회정책의 연계성을 강조하여 둘의 선순환을 추구한 특징이 있음
- 포용국가 비전과 전략이 도출되었던 배경은 한국사회의 지속가능성 위기에 대한 진단: 저성장, 노동시장 양극화 및 빈부격차, 그리고 성차별적 관행으로 진단하고 있으며, 공공사회정책의 미흡으로 인한 재생산 비용의 과도한 부담과 자원배분의 왜곡으로 인식하고 있음. 또한 지속가능성 위기의 근원으로 노동시장 불평등과 그것의 소득, 자산, 교육 불평등의 악순환에 주목하고 있음

- 발제에서는 우리사회 전반의 쟁점과 정책을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현재 2018년 국민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주요한 사회현상들을 살펴보고, 그동안 추진했던 주요한 포용사회를 위한 정책들의 성과와 한계들을 검토하면서 이후의 사회정책의 방향을 함께 모색하고자 함.

## 2 촛불정신

- 촛불혁명에서 확인한 것은 부정부패, 불평등, 불안, 불공정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이며, 그간 수사적 차원에서만 바람직하다고 여겼던 사회정의를 시대정신으로 부각시킨 것
- 촛불혁명을 이끌었던 사회변동의 맥락: 국민의 삶의 관점에서
  - 안정적인 정년보장 불가능하며, 각자도생과 경쟁을 통해 생존, 주거 및 소득에서 불평등 심화
  - 여전한 성역할 분업 체계과 공적 돌봄의 미흡은 일, 생활, 가정의 균형 있는 삶을 어렵게 함
  - 고용불안정과 친밀성 영역의 변화: 20-30대 청년들의 삶과 노동의 불안정성, 20-30대의 불안정한 노동시장 상황은 친밀성 욕구의 포기나 나타남
  - 일상화된 차별과 혐오: 사회 적응 실패와 상실감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양산, 젠더기반 폭력의 증가, 일방적 명령과 횡포, 직장 내 성희롱, 가정폭력은 여전히 체험하는 일상
- 국민이 원하는 삶: 일상과 일터에서 손에 잡히는 구체적인 평등과 복지
  - 일, 가족,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존재와 서로의 관계에 대한 존중
  - 노력에 대한 공정한 보상과 대우
  - 안전하고 미래 설계가 가능한 사회
- 문재인 정부의 국가비전인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핵심가치인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는 촛불정신에 부응한 것이라 할 수 있음

### 3 2018년 지금 주목해야 하는 국민의 삶

#### 1) 국민들의 행복감과 사회적 갈등

##### □ 행복감

- UN 세계행복보고서 5.875점(10점 만점), 57위/156개국
  - 2016년 58위, 2017년 55위
  - ‘세계행복지수: 국내총생산(GDP), 기대수명, 사회적 지원, 선택의 자유, 부패에 대한 인식, 사회적 관용 등으로 측정
- 주관적 안녕지수 50점, 남성 평균 56점, 여성 53점
  - 2018년 카카오 소셜임팩트팀과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 2017년 11월-현재의 225만여 건 데이터 분석
  - 11개 항목(삶의 만족, 삶의 의미, 스트레스, 정서 밸런스, 즐거움, 평안함, 행복, 지루함, 불안함, 짜증, 우울)에 0부터 10까지 척도.

##### □ 사회인식의 성별 연령별 격차

- 국민일보, 공공의창, 리얼미터, 2018년 2~3일 한국사회 갈등에 관한 여론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pm 3.1\%$ , 19세 이상 1018명
- 35.4%는 가장 심각한 한국사회 갈등으로 ‘빈부갈등’, 22.4%는 이념갈등을, 20.4%는 젠더갈등
- 연령별 갈등인식 차이(가장 심각한 갈등에 대한 인식)
  - 20대는 젠더갈등(56.5%), 20대 응답 가운데 빈부갈등이 심각하다는 비율은 22.2%
  - 20대 여성의 62.0%가 젠더갈등을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답
  - 30대의 35.6%와 40대의 48.4%가 빈부갈등 가장 심각하다고 응답
  - 50대도 가장 많은 44.8%가 빈부갈등이 심각하다고 응답
  - 60대 이상은 이념갈등(28.1%)이 가장 심각하다고

##### □ 청년세대의 공정에 대한 요구

- 채용비리, 입시공정성, 갑을관계의 심화 양상
-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전히 20대의 과반은 정부에 대한 지지를 유지하고 있음. 그 이유는 취업과 생계에 대한 즉각적인 요구도 중요하지만, 공정사회에 대한 갈망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줌.

□ 노동의제를 둘러싼 갈등

-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지연
- 최저임금, 근로시간, 위험의 외주화, 비정규직 전환, 탄력근로제를 둘러싼 갈등

2) 미투정국과 2030세대

□ 미투운동은 한국사회의 불평등과 차별의 구조에 대한 재인식과 사회정책의 방향 및 문재인 정부의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과제를 모색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정치 사회적 사건이며, 사회변화와 사회정책의 주체로서 2030세대에 대한 인식의 필요성을 부각

□ 미투운동을 통해 일상화된 성차별과 성폭력의 위험 수준 확인

- 차별과 공정기회 차단은 여성들의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 초래 조직과 일상생활에서의 부당한 차별문화와 성폭력 허용
- 기존 정책은 성폭력, 성매매 등 개별 사안 발생 시 불법성을 다룰 뿐, 성차별의 만연과 고착화에 무기력, 불의를 행한 정치인 및 법조인에 의해 사법적 판단을 받는 모순적인 상황
- 새로운 성평등 의제로 등장한 여성혐오, 차별, 젠더폭력 문제는 기존의 여성정책에서 다루지 못함, 부처보다는 언론 및 대중 폭로나 청와대 청원을 통해 제기, 해결하는 경향을 보임

□ 20-30대 여성의 성차별에 대한 분노와 긴급한 성평등 요구 급부상

- 홍대 누드모델 불법촬영 사건을 유포한 여성 모델 안씨가 징역 10개월의 실형사건 계기로 10-30 여성 중심의 사회운동 분출: 불법촬영 범죄를 당한 피해자 2만6654명 가운데 여성은 84%, 남성은 2.3%, ‘그동안 불법촬영물을 유포하고도 실형을 받지 않은 남성들은 무엇이나’ “웹하드 헤비 업로더는 5만원 벌금이었는데 이게 말이 되냐”라는 구호에 이 사건의 핵심이 응집되어 있음
- 여성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청와대 청원 20만
- 4차례의 편파수사 및 판결에 대한 규탄시위: 6만명 운집
- 낙태죄 폐지 광화문 및 종각 시위
- 디지털 성범죄와 성산업에 대한 분노와 정부의 미온적 대응에 분노: 웹하드 카르텔 및 디지털 성범죄 산업 근절 특별수사요구 청와대 청원 20만 완료(8.26)
- 학교, 일터, 일상에서 성차별 문화와 혐오, 디지털성폭력에 대한 위협과 분노 고조: “우리의 일상은 포르노가 아니다” ‘여성이 아닌 사람으로 살고 싶다
- 이 운동의 주체인 2030여성들은 지난 10년 동안 일상과 온라인 상에서 혐오의 대상이었으며, 2016년 강남역 여성살해 사건과 2017년 촛불혁명 과정에 적극 참여했음. 온-

오프라인에서 페미니스트로 선언하며 넷과 광장의 주체로서 집단과 이념 아닌 이슈 중심으로 활동하는 특징을 보임

- 2030여성들은 높은 선거 참여율을 보였는데, 19대 대선 투표율 같은 연령대 남성에게 6%p 이상 높았음. 또한 취업 뿐 아니라 사회적 불평등과 주거에 대한 불만이 높음 (자료: 입소스 코리아, 2018.7.26-30, 19-29세 236명, 개방형설문)

#### □ 기존의 정책 추진 체계와 패러다임의 혁신 필요성을 부각시킴

- 미투 운동에 대한 정부의 초기 대응의 소극성, 여성경력단절, 출산률 향상, 취약가족지원 등에 초점을 둔 정책지향으로 성차별을 비롯한 공정성에 대한 의제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정책 역량의 한계를 노정
-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 법무부, 교육부 등에 산재된 성차별 감독 및 관리 기능이 현저히 미흡하고 성인지성 결여되어 있음이 확인
- 범정부 추진단 구성했으나 부처별로 부문별 대책을 제시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보완책을 다시 추가하는 방식의 종합대책이 가진 한계를 드러냄
- 비단 젠더 이슈 뿐 아니라 소외와 배제되었던 다른 사회적 쟁점에 있어서도 비스한 양상

## 4 포용사회 국정과제에 대한 검토와 과제

### 1) 노동존중

- 노동존중 사회 실현은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개혁과제로서 노사정 사회적 대화의 추진과 차별없는 좋은 일터를 만들겠다는 구체적인 과제들을 추진하였음. 노사정 사회적 대화 추진은 정부주도의 노사정 체제를 극복하고 노동존중을 위한 정부의 의지의 표현이며 국민적 명분 획득에는 성과가 있었음. 또한 최저임금 인상,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근로시간 단축 등을 추진하였음.
- 그러나 취지와 의지에도 불구하고 노사정 사회적 대화는 추진 속도가 부진하고, 핵심 추진 과제에 대한 사회적 대화와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음. 사회적 대화, 거버넌스의 과정의 한계에 대한 성찰을 요구함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인상 등은 분명 노동공약의 이행이라는 성과로 평가할 수 있지만, 못지 않게 단기간에 양적인 실적 중심의 접근과 정책의 증장기적 효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미흡하여 갈등을 심화시킴. 또한 고용감소, 노동갈등, 역차별 등의 프레임에 갇혀 정책추진의 동력과 성과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한계를 보임

- 노동개혁의 취지에서 후퇴하는 듯한 정부와 국회의 대응은 이후에도 사회적 갈등의 쟁점이며, 촛불시민의 평가를 받아야 할 문제로 남아 있음

## 2) 포용적 복지

- 문재인 케어, 치매 국가 책임제, 부양의무제도 단계적 폐지,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신설 등 다양한 복지정책을 추진했으며, 각종 여론조사에서 복지부문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다른 사회부문에 비해 높게 나타남.
- 포용적 보건복지의 주요 정책과제인 취약계층 사회보장,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노후지원, 주거복지,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의료공공성 확대의 추진을 위해서는 자원조달과 복지의 보편성에 대한 국민적 합의 형성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직면하게 될 도전이자 과제임

## 3)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

- 미투운동과 성폭력에 대한 2030세대 여성들의 사회운동을 통해 대책마련 필요성 인식 (2-2에서 논의)
- 웹하드 카르텔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 성폭력 전담 재판부 전면 재검토 하여 성인지적 재구성, 법무부, 검찰, 경찰청 성평등 전담 조직 및 인력 배치 등 젠더폭력 근절을 위한 체계의 재정비도 긴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임
- 젠더폭력 처벌강화를 위한 일부 법이 개정되고 경찰청 등의 노력은 성과라 할 수 있으나, 가해자에 대한 형량의 상향조정을 넘어 성폭력 가해에 대한 판단기준과 사법체계의 성인지적 개편이 요구됨. 또한 국회에 계류되어 방치된 미투 관련법안의 조속한 심사와 처리가 요구됨
- 성차별 및 젠더폭력, 그리고 성별 인식의 격차는 현재 법과 제도의 정비에 초점을 둔 접근만으로 변화되기 어려움. 성평등 문화와 교육을 통한 문화적 전환이 요구됨.

# 5 향후 추진해야 할 사회정책의 방향

- 포용과 혁신의 사회정책의 실질적 추진: 사회적 대화와 합의, 자원마련, 배제와 사각지대 집단 및 개인에 대한 감수성
- 미래세대인 2030을 위한 정책 필요
  - 2030세대의 성별 인식격차는 노동, 복지, 절차적 공정 등의 물질적 토대를 가지고 있음. 따라서 이념적 갈등이나 대립으로 프레임을 형성하는 것을 넘어 사회정책 내에서 실질적 대안 마련이 필요

- 후기근대적 사회변화와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주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정책환경이며, 여기에 근거한 새롭고 도전적인 정책 상상력이 필요함: 결혼, 출산, 양육 등의 가족구성을 정책의 기준점으로 삼아 정상성을 부여하는 정책접근은 다양한 삶의 양식과 정책요구에 부응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임.
- 현재 청년(고용)정책은 고용장려금 지급 등 일자리 지원 사업에 국한되어 있어서 정책방향의 변화가 필요: 공정기회 보장 노력 강화, 기업간 공정 거래 규제 강화, 중소기업 지불 능력 향상 방안, 행정력 미흡한 중소기업 고용관행 및 노사관계 모니터링, 청년여성 대상 저출산 정책 방향은 남녀 소득의 안정과 성차별 규제에 두어져야 하며, 일터에 만연한 성적 괴롭힘과 차별 문화 근절이 필요

#### □ 정치와 정책의 연계와 조율이 필요

- 개혁과제와 의지의 일관성 있는 추진
- 예산문제나 정당이해에 의한 사회정책 과제의 후퇴 경계(복지예산 축소, 지역구 국회의원의 사회간접자본예산 확보에 대한 국민적 비판, 탄력근로제에 대한 노사정 갈등 등)

#### □ 국민적 소통 방식의 유지와 개선

- 현 정부에서는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 등을 통해 소통의 폭을 확대했으며, 참여와 직접 민주주의의 실험의 장으로서도 의미가 있음: 공론화위원회, 범죄처벌 강화 대책 마련 등
- 성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소통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또한 개선의 과제이며, 다양한 사회적 대화의 방식을 구상해야 함



[평화번영]

# 촛불혁명과 한반도 평화

김성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정책기획위원회\_포럼

## 촛불혁명과 한반도 평화

정책기획위원회 평화번영분과

김성경(북한대학원대학교)

## 위기의 시대

- '위기'는 사회변동을 촉발하는 계기이면서 동시에 구조적 모순을 의미하는 것. (i.e. 경제위기, 정치위기, 범죄위기, 사회위기, 환경위기 등)
- 최근 한국사회의 상황은 그람시적 표현으로는 국면적 위기가 아닌 유기적 위기의 양상으로 판단됨.
- 신자유주의, 자유주의적 대의민주주의, 근대적 지식 패러다임이 바로 한국사회의 유기적 위기의 자유 축을 이루고 있음.
- 1) 신자유주의는 시장적 가치를 확산시켰고, 그 안에서 사람들의 삶의 질은 급격하게 파괴되기 시작하였고 지나친 경쟁 중심의 사회에서 연대감 또한 약화되기 시작.
- 2) 자유주의적 대의민주주의는 현실에서는 결코 시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못해 왔으며, 시민들의 탈정치화는 가속되고 있음(선거 권리를 포기하는 사태가 속출)
- 3) 근대적 지식 패러다임인 합리성과 과학성의 위기 → 측정되지 못하는 것 혹은 근대적 패러다임 외부에 있는 것들을 '비과학' 혹은 '비이성'으로 폄하 → 인간과 자연을 타자화 하는 의식의 확산 → 지식인(대학, 전문가)등의 지식만이 권위를 갖는 상황

\* 결론적으로 위의 위기들로 인해 일반 '사람들'의 분노, 불만족, 열망 등이 충분히 인식되거나 정치적 절차 안에서 논의되지 못한다는 시대적 한계가 존재.

## 촛불의 이중성

- 정의와 공정 등을 주요 가치로 거리로 나섰던 촛불은 지금의 지배 이데올로기를 체화한 시민 → 절차의 공정함, 경쟁의 평등함을 믿고자 했던 이들이,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공정함을 쟁취하고자 촛불을 들었다는 사실.
- 촛불 대부분은 개인적인 이해관계에서의 정당함을 얻고자 했음. 또한 태극기로 대표되는 세력 또한 신자유주의적 질서와 주체성을 내재화한 세력.
- 2016-2017 촛불은 신자유주의적 주체가 신자유주의적인 경쟁의 공정함을 주장한 것.
- 또한 대부분의 정치적 시민운동이 결국 선거제도를 통해 다시금 지배세력의 논리에 포섭되어온 경험을 되새김해 볼 직.
- 촛불 이후의 현 상황에 대한 조금 더 냉철한 질문을 던져볼 필요.

\* 한국사회는 진정으로 '민주화' 되었는가?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은 자신들이 꿈꿨던 이상적인 사회를 여전히 갈망하고 있는가? 촛불 시민들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고, 지금의 그들은 또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가?

## 한국사회의 특이점

- 분단체제라는 한국사회의 상황이 '민족', '국가'라는 중심 축을 두고 더욱 시민들의 열망을 좌절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평등주의적 열망은 언제나 '국가'라는 이름으로 봉쇄되어 왔으며, 사람답게 살 권리는 국가라는 위기 상태에서 유보될 수도 있는 것으로 존재해 왔음 (이것이 분단체제적 성격!)
- 백낙청의 분단체제론이 언급했던 것처럼 분단의 기득권 세력은 남북이 서로 협력하여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분단을 활용해 온 것임. 백낙청은 분단 극복이야 말로 남한사회의 근본적인 모순을 해결하는 과정이라고 설명.
- 민족을 앞세우면서 사실은 보수적인 정치 입장을 지닌 정치 집단이 좌파라고 정의되는 것은 분단을 경험한 상당수의 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상황. (민족문제와 자본주의, 자유주의의 문제가 어떻게 교차하는 지를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음)

## 한국사회의 특이점

- 민족과 분단이라는 중요한 축을 두고 구축된 정치 진영이 신자유주의의 확산을 위해 함께 공조하는 양상.
- 이런 상황에서 백낙청이 설명한 것과 같은 '후천성분단인식결핍증'('분단'이라는 비정상적인 사회구조를 '정상적'인 것으로 인지하게 하는 분단효과)이 일상적인 것으로 여겨짐.

예) 국가보안법, 징병제, 남남갈등과 종북몰이 등.

- 분단체제론은 남북한의 분단을 세계체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독특한 상호적대/상호결합의 굳건한 결합구조'로 해석.
- 한국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는 남북이라는 국가 단위와 지역 그리고 세계체제와의 연관성의 맥락에서 분단체제를 극복하는 것의 문제.

예) 압축적 근대화, 국가중심의 자본주의, 양극화, 비정상적인 이념 갈등, 일상에서 만연한 성폭력, 문화로서 확장된 군사주의 등이 바로 세계체제 하에 작동하는 분단체제의 증거.

## 촛불혁명과 한반도 평화

- 촛불혁명에 대한 비판적 접근을 할 경우 최근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한계와 가능성 확인 가능.
- 분단체제가 세계체제의 일부이면서도 한반도만의 독특한 체제라고 했을 때, 한반도 평화 없이는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도 명확한 사실 → 즉,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촛불시민이 원했던 공정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 피할 수 없는 과정.
- 그럼에도 신자유주의적 주체가 만들어낸 촛불혁명의 에너지가 한반도 평화로만 집중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수의 '촛불 시민'은 피로감을 토로.

**Q) 문재인정부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정부의 역량을 집중한 이유는 무엇일까? 문재인정부가 가장 우선시 했던 정책 목표가 한반도의 분단해체였는가? 혹은 신자유주의적 주체들의 다양한 열망을 다시 한번 '민족'과 '국가'의 이름으로 하나로 만들어내려는 시도는 아니었는가?**

## 촛불혁명과 한반도 평화



- 한반도신경제구상 등과 같은 남북경협의 논의 또한 '촛불혁명'의 정신과 상당한 거리가 있음 → 당장 공정함이라는 프레임이 작동하게 되면서 북한과의 경제 협력의 이득을 냉정하게 살펴보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
- 여성, 장애인, 난민 등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지만 이를 한반도 평화라는 커다란 맥락에서 재의미화 하지 못했음. (예컨대 최근 젠더폭력의 문제로 급부상한 래디컬 페미니스트들에게는 한반도 평화 등의 논의는 자신들의 일상의 문제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

## 촛불혁명과 한반도 평화

- 국내적으로 다양한 욕구와 의견을 갖고 있는 촛불시민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 절차와 경쟁의 공정함을 믿고 있는 대부분의 청년층에게 '민족', '혈맥', '문화' 등 질성 같은 담론이 울림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교착상태에 빠질 경우 국내정치적 위기는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 올 한해 남북대화의 속도에 익숙한 시민들이 향후 지속적인 비핵화 협상의 과정을 과연 끝까지 지지해줄 수 있을 것인가?
- 무엇보다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지향하는 미래상은 어떤 것이 되어야 할 것인가?

## 한반도 평화번영

- **한반도 '평화'**는 북한의 비핵화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 및 제도화를 의미.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정책에서 천명한 것처럼 비핵화의 교환물로 북한의 체제 안전을 보장함으로써 남북한의 정치적 공존 체제를 구축.
- **한반도 '번영'**은 한반도 신경제지도, 신북방정책, 신남방정책, 방위산업 육성 등 경제적 이득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는 번영을 위한 평화(경제적 교류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전쟁위험은 제거 및 투자를 위한 정치 안정화)이거나 평화를 통한 번영(정치적 해결 다음에 번영이 도래) 혹은 평화와 번영이라는 목표를 동시에 포괄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음.
- **한반도 '번영'**은 아시아(북방, 남방)라는 지역 경제체의 중심으로 부상하겠다는 야망을 표명한 것이며, 신경제지도는 지정학적 요충지인 남북한을 경제권의 일부로 연결하여 중국과 러시아의 자원과 시장을 활용하면서도 남북의 경제를 공동 발전시키겠다는 기획.
-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는 평화(남북 공존), 번영(경제적 이득)에 집중한 것으로 보일 수 있음.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 같은 경우에는 탈식민적 국가가 '하위제국'이 되고자 하는 열망을 내포.

## 탈분단으로서 한반도 평화·번영

- 분단에서 벗어나는 것: 탈분단으로서의 평화 혹은 통일 등의 논의를 재구축할 필요.
- 정전체제의 모순을 해결하는 체제로서의 평화 체제
- 군사와 안보를 중심으로 한 국가에 대한 새로운 시각 → 시민들의 삶을 보장해줄 수 있는 체제? 복지와 시민 안전을 우선시 하는 정치체?
- 일상과 사람의 수준에서의 '안보', 즉 인간안보의 가능성  
:인권, 민주주의, 자유, 평등, 공정, 정의라는 가치의 구현
- 민족 공동체 건설이라는 당위적 접근보다는 현 분단체제의 폐해를 극복하는 또 다른 공동체 건설 → 새로운 상상력과 접근 요구 → 근대적 국가 체제에 대한 반성으로 확장.
- 분단으로 고통 받는 글로벌 코리안과의 화해와 치유: 재일조선인 (조선적 - 무국적자), 붕괴된 조선족 사회, 고려인, 그리고 해외 이주민
- 번영에 대한 재사유: 저성장 시대에 '번영'이라는 것을 경제적인 것으로 정의할 경우 시민들의 열망이 결국 실망으로 전환될 수 밖에 없을 것이며,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는 포용국가 등의 비전이 결코 경제적 번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이기 때문.

감사합니다